

정부, 전공의 29일 복귀 '통첩'... 의료계 반발 더 커지나

미복귀자 사법처리 경고...전임의 집단행동 막기 위한 '초강수'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전공의 86% 사직서 제출 병원 떠나
전임의들 다음주부터 잇따라 재임용 포기... 의료붕괴 현실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29일까지'로 못 박는 초강수를 등에 따라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단체 사직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음주 전임의들의 집단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댔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한이 지난 후 다음주부터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를 하는 행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나선 점에 서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때 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광주·전남 전공의 사직률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다. 전남대병원 본원·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8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 전공의 142명 중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체 전공의 86%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현재 대학병원의 시스템 때문에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함에 따라

의료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가 응급실 '전화 뱅뱅이'를 돌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상 없음', '전문·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으며 50여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의료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9일을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선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유로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의료계에서는 다음달 1일이 대학병원 전임의들의 재임용 시점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전임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인턴·레지던트 임용을 포기한 상황에서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까지 병원을 떠나게 되면 겨우 버티던 의료현장이 아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 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남대병원에서는 다음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의 의과대학 졸업생 중 95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다음달 레지던트로 들어올 76명 중 62명의 인턴도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도 인턴으로 들어올 졸업생 36명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고, 레지던트의 경우 37명의 인턴중 35명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 상황에서 전남대병원에 현재 근무중인 100여명의 전임의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임용 시점인 다음달 1일 개원과 재임용 포기 등의 사유를 밝히면서 총원이 50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조선대병원에서는 다음달 1일 전임의 1년차 임용 예정자 14명 중 12명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년차를 맞는 전임의 19명중 15명이 개원을 하기로 해 4명만이 병원에 남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복직하는 일반병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여명이 넘어선 가운데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항동의 한 일반병원이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광주 서구을 김경만·김광진·양부남 3인 경선

결선 없이 100% 국민참여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던 광주 서구을 선거구의 경선 방식을 전략 공천이 아닌 3인 경선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광주 선거구 8곳 모두 공천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선 후보는 김경만 국회의원(비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3명이다.

경선 투표는 별도 관리당원 투표 없이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광주 서구을



김경만



김광진



양부남

서구을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양향자 의원이 탈당하면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 그동안 전략 공천설 등이 나돌면서 기존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 분당갑 지역구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서울 영등포구에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서울 마포갑에는 영인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2금융 고금리대출 소상공인에 내달 3천억 이자환급

대통령실, 금융지원 패키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정부가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패키지는 ▲ 은행권 민생금융 ▲ 소상공인 대한대출 ▲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한

다.

지난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졸업은 기쁘지만 취업 생각하면 막막해요" ▶7면
기획 특집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18-19면
KIA 스프링 캠프-실전 돌입 부상과의 전쟁 ▶22면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